



방어 정책 쓸 듯



주식 시세를 보고 있다. 중국은 올해 6.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춘 신화=뉴시스]

폭발을 방지하는 데 주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미·중 사이의 무역 마찰이 통상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트럼프 정부가 관례를 뛰어넘는 대중국 정책을 구사할 경우 무역·환율·투자·기술이전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수 있다.

미국은 위안화 가치 상승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중국도 위안화 절상을 통한 산업구조 조정을 시도할 수 있지만 대폭 절상할 경우 부진한 수출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실업을 더욱 심화시켜 국내 정치에도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위안화 가치 상승 기대감은 국제유동성이 중국으로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자산 거품을 막아야 하는 문제로도 이어진다. 따라서 중국의 환율정책은 미국과의 통상 전쟁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투자는은행들은 중국 경제의 경각락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중국 내부에선 6.5% 성장이 '뉴 노멀', 즉 새로운 경제 상태

시기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올해 중국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 속의 발전(穩中求進)'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온중구진은 지난해 12월 시진핑 주재로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경제정책의 핵심 추진방향이다. 안정 속 성장 정책인 셈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성장 모멘텀을 잃지 않으려는 중국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라는 평가다. 이후 부동산 거품과 금융 리스크 등 국내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성장률을 6.5% 전후로 설정했다.

결국 '안정 속 성장'을 앞세운 중국은 부동산·금융 등 리스크 방지와 공급 측 개혁 등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정책의 방향은 공급 측 개혁 심화, 재정정책 효율성 확대, 통화정책 중립 기조 유지, 부동산 거품 억제, 기업 경쟁력 확대, 농촌 개혁, 국유기업 개혁, 민생 개혁 등 8개 분야로 세분해 미시적인 경제 운용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플러스 성장 진입

경기 부양보다 물가 안정, 재정 건전성에 우선순위

김동혁(고려대)·이상준(국민대) 교수

지난 2년간 러시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2015년 -3.0%, 2016년 -0.6%)과 고물가(2015년 12.9%, 2016년 5.8%)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보였다. 이는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결함과 대외 요인이 결합해서 나타난 결과다. 러시아는 에너지자원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은 총수출의 55%, 재정수입의 40%,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한다. 대외교역, 외국인 직접투자 및 해외 차입에서도 유럽연합(EU)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러한 결합 속에서 국제 유가 하락세와 서방의 제재가 지속됨에 따라 러시아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졌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하락세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러시아 정부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올해 러시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회복 수준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국제금융기구들은 대체로 1%대, 러시아 정부는 0.6%대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물가상승률이 4%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러시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은 지난해 11월 24일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발표한 '2017~2019 러시아 연방 사회·경제발전 전망'과 12월 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연례 국정연설에서 나타난 기조에 입각해 추진될 것으로 예

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닥친 경제적 난관이 단순히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경제 내부의 구조적 모순 때문임을 지적하면서 구체적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푸틴이 지적한 러시아 사회·경제 문제 해결 방안은 경제개발부의 중기 전망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7~2019년 러시아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은 ① 러시아 연방의 투자 유치 제고, 사업 풍토 개선 및 사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 ② 예산의 효율적 지출 ③ 수입대체 ④ 생활수준 개선 및 인적자본

IMF 1%, 러시아는 0.6% 성장 전망
물가 상승률 4%대에 머무를 듯
선불리 확장 정책에 나섰다
더 큰 어려움에 대응 못할까 신중

투자 증대 ⑤ 지역 균형 발전 ⑥ 국가 기구의 기능 향상 ⑦ 정보통신기술과 첨단기술 개발 지원 등이다.

이런 중장기 정책 방향은 러시아 정부가 성장을 위한 경기부양보다 물가안정과 재정수지 건전성 확보에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장기 저성장을 감안한 이런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대다수 러시아 싱크탱크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이사 노첵체프 소장은 러시아 정부의 2017~2019년 경제 전망치



푸틴 대통령

조차도 과대 평가돼 있고 경제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 정부의 정책 대응이 조심스러운 이유는 현재의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선불리 확장 정책을 펼칠 경우 더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이런 분위기는 푸틴의 대국민 연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추세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러 관계 개선 기대 등으로 경제가 들뜰 수 있는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한 내용이 연설에 포함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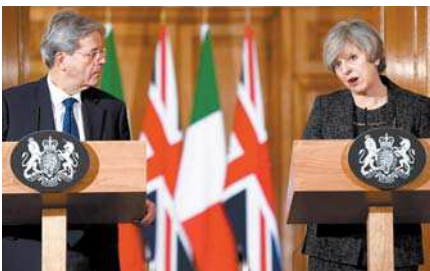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실질 소득과 빈곤층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현 상황이 잠재성장률을 훼손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14~2016년 사이 경제 침체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도 알고 있다. 러시아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가 경기 회복과 성장 및 시장의 자동적인 조절 기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에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지만 경제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정치 지도자들의 기억 속에 현존하고 있는 한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판단한다. 러시아 국제관계협의회(RIAC)의 티모페예프 사무총장은 올해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일대일로' 계획의 연결과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푸틴의 일본 방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관계 다변화 관점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러·일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러시아가 중국·일본에 대해 갖는 기대는 큰 반면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다는 점이다.

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2900억 유로에 달하는 은행 부실채권 정리와 23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자본 확충 여부가 이탈리아 위기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2016년 영국 경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당초 우려와 달리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경제성장률 2%). 영국은행(BOE)의 금융완화 정책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호조세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BOE는 올해 영국 경제를 비교적 낙관하고 있지만 싱크탱크들은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싱크탱크인 NIESR은 경제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내수경기 둔화로 인해 성장률이 1.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싱크탱크들은 브렉시트 협상과

브렉시트 협상 어떻게 될지 몰라
영국 소비 위축, 투자 감소 불가피
이탈리아 은행 부실, 경기회복 발목
2900억 유로 부실채권 정리가 변수



지난 9일 런던의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데리사 메이 영국 총리(오른쪽)와 파올로 젠틀로니 이탈리아 총리. [런던 로이터=뉴시스]

관련한 불확실성을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동안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던 민간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브렉시트 협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로 기업투자가 저조해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수경기 둔화의 트리거가 될 파운드화 약세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운드화 약세는 수입물가 상승을 초래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급격한 물가상승은 실질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가계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다. 이로 인해 영국의 대외수입도 2년 연속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탈리아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는 일은 이탈리아는 물론 유로존의 존립에 매우 중요하다. 이탈리아는 은행 부실 정리와 더불어 생산적 투자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이탈리

아만의 노력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려우므로 유로존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CER은 세 가지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탈리아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유연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유로존 회원국들은 재정정책에서 긴밀히 상호 협력해야 한다. 경상수지 흑자와 재정 여력이 충분한 국가들은 재정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이탈리아의 은행 위기 해결을 위해 은행동맹(banking union)을 신속히 완성해야 한다. 시중은행들의 보유 국제 처리 문제를 합의하고 유로존 차원의 공동예금보증기금을 서둘러 설립해야 한다.

셋째, ECB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유로존 경제가 완전 회복할 때까지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CER은 이탈리아와 유로존 국가들이 협력해서

둘러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반EU 정서가 고조돼 브렉시트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영국 경제는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새로운 경제 관계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2년간 진행될 브렉시트 협상이 중요하다. 12개 기본원칙이 제시된 영국 정부의 협상전략(2월 2일 발표)에는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유럽 단일시장은 물론 관세동맹에서도 탈퇴하는 강경한 입장(hard Brexit)이 포함돼 있다. 영국 정부는 EU가 수용하기 힘든 이민 통제와 사법권 독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EU 예산 부담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영국과 EU 모두에 경제적 충격이 큰 하드 브렉시트 대신 절충안으로 맞춤형 관세협정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